

민족주의의 정치생태학

권혁범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의 제목을 쉽게 풀어쓰면 민족주의가 환경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주의와 환경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민족주의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어왔으며 다양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자의적인 개념으로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환경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이론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인식과 변화방향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이견의 잠정적인 공존조건의 반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추상적 수준에서 양자간의 관련을 검토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구체적 조건과 사안에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민족주의를 환경파괴의 주요 이데올로기로 규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생태적 가치의 전면적 파괴를 막는 실용적 방벽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일반적 경향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① 현대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서 민족주의적 인식체계가 적합한가? ②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어떠한 생태적/반생태적 경향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2. 환경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오늘날 환경문제가 국민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국제적 혹은 지구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지구환경, 국제환경문제 등의 용어는 이제 매우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자본과 상품 이동의 지구화(‘세계화’)로 인하여 환경 오염 및 파괴가 ‘인류공동의 문제’이며 ‘지구촌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생물의 한 류로서의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림 파괴, 산성비,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단순히 일국 차원의 이해와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1972년 이후 환경에 관련된 국제 레짐이 계속 증가해온 것은 이런 연유다. 민족주의적 인식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인식 틀로 퇴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보편적 문제’라는 일반적 인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불평등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연적 재해도 아니며 순수한 자연과학적 현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제국주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이 어떻게 환경과 매개되어 나타나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개념이다.¹⁾

우선 제3세계 주변부 국가들은 환경이라는 새로운 가치기준이 중심부의 상품경쟁력 강화와 무역통상에서의 있어서의 주변부 및 준주변부에

1) 이 점에 대해서는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1992, 제1장 참조.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환경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주변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것은 내부 산업화의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환경적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주변부의 경제발전은 둔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얘기된다. 환경적 기준의 강화는 중심부에서 먼저 발전한 환경산업의 이익강화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근대의 초엽부터 중심부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야기한 무제한적인 생태파괴적 전쟁 및 정복의 과정 그리고 1960, 70년대에 성행했던 유해폐기물 및 공해산업의 주변부 이동을 고려한다면 환경을 매개로 한 중심부의 제국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을 매개로 하는 신제국주의적 경향을 경계할 때 환경문제의 범지구적 보편성, 인류성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 심층생태학(deep ecology)조차 사실은 서양의 지배와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변형태라는 제3세계의 의심²⁾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놓여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범인류적 문제’라는 인식은 애매모호한 이해관계를 조장하는 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환경 파괴 및 오염의 책임자/수혜자를 피박탈자/피해자와 얼버무려 동일시하는 정치·사회적 암시를 낳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북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책임, 남의 일부 및 북의 다수 과잉소비계층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보수적 기능을 할 위험이 있다. 물론 반생태적 생산/소비로 인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이 인류공동의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지리공간적인 차원에서 그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주변부의 주변부’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주어진다. 점이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연파괴의 재앙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성장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듯이 재앙과 위험은 지구의 주변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반면 중심부에게는 그 피해를 지연시킬 여유와 장치를 마련해두

2) Arne Naess, "The Third World, Wilderness, and Deep Ecology," in George Sessions(ed.), p.397.

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주권론이나 발전의 권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족국가(nation-state)의 경계를 정치·경제적 권리의 경계와 동일시하는 민족주의는 환경제국주의에 대한 방과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환경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친환경적 기술의 발전 및 규제의 강화와 환경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해유발 중공업이나 산업폐기물을 제3세계에 재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의 일부 지역 및 계층의 친환경적 삶의 양식이 남의 환경파괴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남’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인구증가가 환경위기의 주요인이라는 ‘북’의 주장은 고급승용차의 운전자가 나무를 베는 농부에게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묻는다는 비유만큼 자기모순적이고 공정치 못한 것이다. 인구증가를 통한 자원 고갈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신멜더스주의적 이론이나 과잉인구와 식량의 부족을 대비시키며 ‘생태학적 한계’를 강조하는 이론은 ‘남’에게 환경파괴의 책임을 돌리려 한다. 그러한 주장은 전세계 인구의 25%에 불과한 ‘북’의 주민이 전세계 소비의 75%를 차지하며 북미의 에너지 소모가 제3세계의 40배에 달한다든가, 미국인 1인의 종이소비량이 인도인의 115배라는 통계 앞에서 근거를 잃는다. 확실히 ‘북’의 대중매체가 선도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은 책임의 소재와 오염 및 파괴의 현장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고속적인 산업화에 주력해야 하며 ‘환경과 발전의 조화’는 선진국이 그런 것처럼 일정한 수준의 단계에 도달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북’이 ‘남’의 발전에 대한 ‘민족적 주권’ 혹은 ‘환경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북의 환경의식은 사실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유행하는 환경주의가 사실은 녹색산업

3) 권혁범, 『무엇이 생태지향적인 사고를 가로막는가?』,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숲, 2000, 259쪽.

을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지구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⁴⁾ 환경문제의 전지구적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흔들린다. 환경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지역과 네이션(nation)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 중심부-준주변부-주변부로 도식화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작동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냥 환경은 전인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진술이다. 그렇다면 제1세계 중심적인 환경과 발전의 정치학에 대항하여 민족국가 단위 중심적 사고와 실천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가?

3. 민족주의, 발전, 생태성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족(nation)의 생존, 동질성 유지, 번영을 목표로 하는 근대 이데올로기로 규정된다.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근대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정치경제적 해석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요구하는 일정한 단위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족의 생산’이 요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종족적 집단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탄생하였다.⁵⁾ 자본제로의 이행에서 필수적인 봉건적 신분제의 제거에서 민족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구성원간의 적어도 형식적 평등과 평등한 권리를 내포하는 민족의 개념은 봉건적 신분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창출로 직결되었다. 집단적 귀속감은 강고한 신분적 위계질서에 의거해서는 형성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근대 민족의 형성은 결국 형식적 평등을 기초로 하

4) 레슬리 스클레어, 『지구사회학과 지구환경변화』, 마이클 레드클리프트·테드 벤튼 엮음, 이기홍·조재광·이강익 옮김, 『지구환경과 사회이론』, 한울, 1996, 282-283쪽.

5) Umut Ozkirimli,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pp.131-133. 근대주의자의 민족주의 해석의 일부이다.

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민족주의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나타나기 시작한 민족을 국가단위로 재배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독립적인 국가건설은 근대 민족주의의 근본적 목표였다.

민족주의는 국가의 탄생과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산업화가 수반하는 불균등한 발전에서 오는 여러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지역적·성적·계급적 불평등의 심화는 단순히 국가의 물리적 탄압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 그러한 갈등을 ‘국가의 이익’, ‘민족 번영’의 수사 하에 은폐·억압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이념적 수단은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가 불균형적인 발전주의와 친화력을 갖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하다.

구체적으로 민족주의 틀에 의존할 때 생겨나는 가치관과 결과의 생태성/반생태성에 대해 검토해보자.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가 배제와 차별의 원리를 통하여 타자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민족 중심적 인식은 오히려 자국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 타국가, 타민족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암시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타’는 중심부이든 주변부이든 똑같은 대상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수백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드러난 의식을 검토해보자.

이념대결의 구도가 와해되면서 세계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국가이기주의가 결합한 형태의 끝없는 무역전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자본과 기술이 우월한 국가가 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놓고 국가간에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또한 그 대립을 정당화하고, 후진국가에 대한 착취행위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⁶⁾

여기서 드러나는 민족주의적 세계관에서 타자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묘사된다. 국가이익을 위해 ‘무한전쟁’에 참여하는 집단적 주체가 자원을 최대한도로 착취하는 과정은 당연한 것으로 전

6) 김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3권, 해냄, 1993, 69쪽.

제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자연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민족주의는 동남아와 중남미 등을 누비며 노동과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소비하는 자본을 지지하게 된다. 그것은 오로지 ‘민족번영’의 차원에서 조명된다. 진보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도 재분배에 관련된 것이지 민족번영을 위한 확대재생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연 및 타자의 동원에 대한 제재 요구는 아니다.

덧붙여, 민족주의에서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변부로서의 인식보다 자민족 인식이 더 강화된다. 1970년대 초반의 신국체경제질서를 위한 제3세계 운동이 실패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다.⁷⁾ 한국사회에서 강한 민족주의 의식이 제3세계 의식으로 고양되지 않았던 것도 단지 주변부에서 준주변부로 구조적 이동, 세계체제의 ‘초청에 의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다. 거기에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과도한 자민족중심적 세계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족이라는 단위개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애매모호함도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한 인류라는 개념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민족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족이라는 동질적 집단이라는 인식은 사실은 민족 내부의 소집단간에 갖는 다양한 차별성을 은폐한다. 그 안에는 친환경적 그리고 반생태적 집단 및 개인도 존재한다. 더구나 세계체제의 주변부가 단순히 지정학적 개념을 넘어, 이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계급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에 민족주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도 주변부는 존재하며 라틴 아메리카에도 중심부라고 칭해질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생태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나아가 문제인식을 현실적으로 하는 데 방해가 된다.

가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에 대해서 선진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선진국 정부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가 명백한 경우도

7) 하경근, 『제3세계정치론』, 한길사, 1982, 제2장 참조.

적지 않았다. 그것에 이해관계를 갖는 초국적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것은 남의 대다수 정부가 갖는 일반적인 성향과 유사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 정부 및 자동차·철강관련 기업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지구기후동맹’(Global Climate Coalition)을 결성하기까지 했다.⁸⁾ 또한 아시아권이 배출하고 있는 가스가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⁹⁾ 세계 원자로의 4분의 1이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과 북 혹은 민족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 친환경적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족 대 민족의 도식은 위험하다. A라는 민족이 반생태적이고 B라는 민족집단은 친생태적이라는 이분법은 복잡한 현실의 왜곡이다. 오히려 ‘반’과 ‘친’은 많은 경우 민족과 계급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다. ‘같은’ 민족으로 분류되는 집단 안에서의 다양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생태적 차이가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현실인식은 생태지향적 관점과 이해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 문제가 환경파괴의 원인제공에 있어서의 민족을 가로지르는 차별성 문제라면 혜택의 문제에 있어서의 차별성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발전의 권리’라는 개념을 명분으로 하여 추진되고 정당화는 경제성장은 과연 민족주의가 암시하듯 민족에게, 즉 그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댐, 원자력발전소, 온천, 중화학공업, 간척공사 등의 추진 및 건설에서 오는 혜택은 매우 계급차별적으로 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발전은 사실 ‘성장연합 엘리트’¹⁰⁾ 및 관련

8) 요네모토 쇼우헤에, 박혜숙·박종관 옮김,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 따님, 1995, 109-110쪽.

9) Larry Pratt and Wendy Montgomery, “Green Imperialism: Pollution, Pertinence, and Profits,” in Leo Panitch(ed.), *The Socialist Register 1997*, London: Merlin Press, 1997(이삼성, 『세계와 미국』, 한길사, 2001, 744쪽에서 재인용).

10) 이 개념은 다음의 논문에서 빌려온 것이다. 박순열, 『새만금을 통해 본 한국 생태통치체제에 대한 연구: 전북성장연합의 생태통치전략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2001년 10월 19~20일) 발표 논문. 그는 새만금 지속추진의 세력으로서 지방정부와 의회, 상공회의소, 언론 그리고 학계 일부와 지역 시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한 연합은 주변부 상층 부르주아, 관료, 초국적 개발 자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발전에서 오는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환경정의’라는 개념에 의해 이론화되어 있다.¹¹⁾ 민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은 그러한 차별성을 드러내는가? 민족은 그것을 숨긴다. 오히려 내부적 불균등 분배를 ‘민족번영’, ‘조국발전’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환경파괴로 일어나는 계급적 문제를 은폐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환경주권, 발전주권 등으로 집약되는 민족주의적 태도와 가치관은 한 사회에서 어떤 정치·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재생산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생태적인 경제성장 혹은 산업화를 정당화하는 이념이었다. 민족과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다. 민족을 위해서 발전은 요청·정당화되었고 따라서 발전에 대한 도전은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반민족적이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대로 발전을 위해서 민족은 수시로 동원되었다. 한국사회의 경우, 발전에 필요한 동기와 그것이 수반하는 차별적 결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는 반공주의만큼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조국의 발전’ 혹은 ‘민족의 번영’이 초월적인 국가의 최고목표로 제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봉쇄된다. 민족주의는 발전주의와의 결합을 통하여 무제한적 성장논리를 시민들에게 내면화시킨다. 단순히 발전이 아니라 ‘조국의 발전’이라는 구호는 효과적이었으며 동시에 강도 높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성격의 노동에 강력한 동기부여와 초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했다.

민단체를 ‘전북성장연합’이라 부르고 있다.

11)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1999 참조.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 하에서 생태적 가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즉각 거부되거나 민족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의미를 갖는다. 생태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내재적이거나 생명중심적이다. 그것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인간중심적 환경주의자의 경우에도 생태적 가치는 단지 도구적인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족발전주의의 가치체계에서는 자연은 오로지 민족집단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된 ‘후발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인식체계는 무제한적 착취를 통한 무제한적 성장을 민족집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소위 국민/민족적 정체성, 즉 특정 국가·특정 민족에의 강렬한 소속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집단적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국 및 자민족의 번영과 생존은 최우선적인 목표로 각인되며, 따라서 그 순간 모든 다른 요소, 특히 생태적 가치는 철저히 도구화된다.

더구나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갖는다. 통합적 구심점으로서 국가는 민족주의자의 뿌리다. 국가주의는 대체로 민족주의와 동일시된다. 특히 후발국에서 시장기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근대적 시민사회를 자생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민족부르주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된다.¹²⁾ 그러한 국가중심적 사고와 체계는 산업화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파괴 및 오염을 오히려 조장하고 정당화한다. 그것은 국가라는 물리적 폭력의 합법적 소지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환경운동가가 ‘반국가사범’으로 취급받은 것은 단순히 정치적 탄압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그만큼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정복과 약탈은 국가의 이름으로 합법화·정당화되었으며 국가는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에서라면 오히려 개별적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자연

12) 최장집, 『박정희 정권과 한국현대사』, 《계간 대화》 제5호, 1995 참조.

공공재에 대한 파괴를 별다른 저항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모든 국토 내의 자원은 국가의 징발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현재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을 예로 들면서 국민국가권력의 친환경적 성격을 앞의 결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친환경적 제도 및 법의 도입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용하는 경향을 벗어나기 힘들다. 부의 확대재생산 메커니즘이 환경파괴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때 민족중심적 사고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무비판적 순응으로 대응함으로써 반생태적 산업구조를 지속하는 데 기여한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보존하자!”는 식의 구호가 불가능한 이유다. 자연이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고려된다면 그것은 “쓰레기 줄여서 경쟁력 10% 높이자”는 식의 발상에 국한될 뿐이다. 환경이 심각하게 고려된다면 그것은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기능하게 될 때이다. 따라서 환경은 경쟁력 강화의 한 수단이 될 뿐이다.

끝으로, 민족주의가 요구하고 유지하는 국민국가의 틀은 중앙집중, 위계질서, 거대주의를 지향한다. 그러한 성격이 분권화, 수평적 질서, 작은 단위, 지구적 협력을 지향하는 생태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은 명백하다.¹³⁾ 지구의 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계를 가로질러 나타난다. 반면에 생태지향적 운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권의 복원 및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강, 바다, 육지를 인위적으로 가로지르는 국민국가의 경계는 매우 정치·역사적이며 생태계의 권역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론(bioregionalism)에서 얘기되는 ‘지역’은 산업화 및 지정학적 투쟁의 역사에서 인위적으로 구획지어진 ‘지역’과 충돌한다. 그것은 재순환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자기유지적인 삶이 가능한 생태적인 경계에 토대된 개념이며, 따라서 단순히 인간사회의 경제적 동력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13) Thomas Prugh, Robert Costanza, and Herman Daly, *The Local Politics of Global Sustainability*,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0, pp.35-36.

지리적 경계망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¹⁴⁾ 따라서 민족주의는 생태 지향적 재구획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러한 류의 민족주의는 세계화되어버린 지구사회에서 민족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타협을 통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주변부의 민족주의 담론을 지구적 차원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주도하는 있는 환경규제를 단순히 민족 대 민족, 중심부 대 주변부의 차원에서의 인지하게 만든다.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가적 경계 혹은 단위를 강조하면 할수록 생태와 반생태라는 틀은 묻혀버린다. 초국가적 협력을 요구하는 지구적 환경문제, 즉 오존층 파괴, 산성비,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민족중심적 사고가 결과할 수 있는 최선은 국가별 이해관계의 충돌의 방치이다.

가령 1970년대초 제3세계 국가들이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그것을 “북의 부국과 고도산업국들이 만들어낸 음모”라고 몰아붙인 것은¹⁵⁾ 민족중심적 사고가 갖는 위험을 증거한다. 부국에 대한 분노,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반생태적 제도 및 운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족국가단위별 경쟁을 장려하고 정당화할 때, 환경문제를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틀로 바라볼 때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가령 미국 정부는 바다거북이 새우잡이 그물에 걸리는 것을 막는 장치인 TEDs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무역제재를 가했다. 신식민주의와 관련 없는 이러한 친환경적 조치는 일부 국가들의 강한 주권론적 반대에 부딪혔다.¹⁶⁾ 국가 혹은 민족 주권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국제적·지구적 협력과 타협은 어려워진다.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규제를 ‘주권’의 이름 하에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족

14) 문순홍,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담론의 생태학』, 솔, 1999, 307-321쪽; 제프리 리프킨, 이정배 옮김, 『생명권 정치학』, 대화, 1996, 379-387쪽 참조.

15) E. U. von 바이츠체커, 이필렬 옮김, 『지구환경정치학』, 아르케, 1999, 34쪽.

16) 힐러리 프렌치, 주요섭 옮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도요새, 2001, 129-130쪽.

주의적 정서와 가치에 기초한 각국의 정치문화에 토대하여 항상 대중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고전적인 국민국가간 체제에서 당연시되었던 주권의 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타협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주변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제적 환경규제를 환경제국주의라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일면적이고 감정적이다. 환경문제의 제국주의/식민주의적 차원에 대한 구체적 비판과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이나 저발전국의 반생태적 경제성장 모델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전략주의 사고의 반영이다. 결국은 북의 대다수 선진산업국이 이제는 극복하려 하는 환경파괴적 발전 모델에 스스로를 몰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이 이야말로 감정적 민족주의가 끼치는 최고의 반생태적 해악일지도 모른다.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주의적 시각과 지구적 협력의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동일시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주권의 축소를 무조건 ‘국제금융 신식민주의’¹⁷⁾와 동일시한다면 여전히 지구적 환경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4. 지구적 시민사회를 향하여

앞서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로 민족주의가 생태파괴적 세계화에 대해 방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확률은 매우 낮다. 생태지향적 운동과 집단은 현재 미국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에 매우 비판적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시장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며 환경파괴를 가속화한다

17) 요네모토 쇼우헤에, 앞의 책, 1995, 151쪽.

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의 조절기능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며, 조명래의 지적처럼 “지구적 통합은 파편화된 무수한 개체들을 결합시켜주지만 그 관계가 국가와 같은 공동체적 조절기구에 의해 통합되지 못함으로써 불안정한 ‘경쟁적인 결합’으로만 남게 된다.”¹⁸⁾ 이들 결합이 점점 개발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족주의에 입각한 일국적 관점과 운동으로는 불가능해지고 있다. 개인을 넘어서면서도 국가의 밑에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민족국가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¹⁹⁾ 여기서 더 생각해볼 것은 민족주의에 토대한 국민적 정체성의 문화가 국적과 개별 국가의 법을 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매우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조차도 주권국가들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민 개인은 어떤 공식적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²⁰⁾ 지구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것에 기초한 협치(global governance)가 환경과괴를 억제할 수 있는 토대²¹⁾라면 장기적으로 민족주의는 이런 점에서도 극복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이며 방법론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실천하며 전지구적 연대를 피하는 초국민국가적 시민사회의 형성이 환경문제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민족주의는 결국 방해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논의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실천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발전주의의 다른 축이며 점점 지구화하면서 탈민족적 협력을 요구하는 환경문제와 모순되는 이데올로기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한 생태적 비판이 민족주의가 갖는 현실

18) 조명래, 『녹색사회의 탐색』, 한울, 2001, 216쪽.

19) Paul Wapner, “Politics beyond the State,” in John S. Dryzek and David Schlosberg(eds.),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510.

20) 힐러리 프렌치, 앞의 책, 2001, 175쪽.

21) 힐러리 프렌치, 제9장 참조.

적 힘을 무시하고 근본생태주의로 가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²²⁾ 여전히 국민국가들은 생태적 아젠다를 제1순위에 놓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고 또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간의 환경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적 관계도 항시적 불안과 충돌의 지평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권혁범 kwonhb@dju.ac.kr

참고문헌

- 권혁범. 2000, 『무엇이 생태지향적인 사고를 가로막는가?』,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 김진명. 199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제3권, 해냄.
- 레슬리 스크레이. 1996, 『지구사회학과 지구환경변화』, 마이클 레드클리프트·테드 벤튼 엮음, 『지구환경과 사회이론』(이기홍·조재광·이강익 옮김), 한울.
- 문순홍. 1999,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지역론』, 문순홍 엮음, 『생태학의 담론-담론의 생태학』, 솔.
- 박순열. 2001, 『새만금을 통해 본 한국 생태통치체제에 대한 연구: 전북 성장연합의 생태통치전략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2001년 10월 19~20일) 발표 논문.
- 요네모토 쇼우헤에. 1995,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박혜숙·박종관 옮김), 따님.
- E. U. von 바이츠제커. 1999, 『지구환경정치학』(이필렬 옮김), 아르케.
- 제프리 리프킨. 1996, 『생명권 정치학』(이정배 옮김), 대화.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22) 로즈만은 이런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른 국제문제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는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지역주의(regionalism)와 민족주의 간의 절충을 주장한다. Gilbert Rozma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ontext for Environmentalism: Assessing Environmental Goals Against Other Priorities in the 1990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 No. 2, August 2001, Nanam, pp. 27-29.

- 최장집. 1995, 『박정희 정권과 한국현대사』, 《계간 대화》 제5호.
- 하경근. 1982, 『제3세계정치론』, 한길사.
-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 힐러리 프렌치. 2001,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주요섭 옮김), 도요새.
- Arne Naess, "The Third World, Wilderness, and Deep Ecology," in George Sessions(ed.).
- Gilbert Rozman. 2001,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Context for Environmentalism: Assessing Environmental Goals Against Other Priorities in the 1990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 No. 2, August, Nanam, pp.27-29.
- Larry Pratt and Wendy Montgomery. 1997, "Green Imperialism: Pollution, Pertinence, and Profits," in Leo Panitch(ed.), *The Socialist Register 1997*, London: Merlin Press(이삼성. 2001, 『세계와 미국』, 한길사, 744쪽에서 재인용).
- Paul Wapner. 1998, "Politics Beyond the State," in John S. Dryzek and David Schlosberg(eds.),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Oxford University Press.
- Umut Ozkirimli. 200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